인구 8만 수완지구 정류장 43곳 중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설치 단 6곳

“언제 오나” 버스 기다리다 지치는 주민들

대중교통 소외 큰 불편

추가 설치 계획도 없어

광주시민들이 6일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없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수완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8만여명이 사는 수완지구에는 전체 43곳의 정류장 중 단 6곳에만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버스노선이 부족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수완동)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완지구의 인구는 8만여명으로 단일 동으로는 광주에서 가장 크지만 광주시는 추가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이 같은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T)이 설치돼 있는 광주지역 버스정류장은 동구 57곳, 서구 102곳, 남구 63곳, 북구 144곳, 광산구 85곳 등 모두 451곳이다.

이 중 수완지구(수완동)에는 수완모아엘가, 수완새한포유, 수완우미린2차, 수완양우내안애, 성덕교,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북) 등 6곳의 버스정류장에만 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수완지구 내 전체 버스정류장이 43곳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산구는 최근 ‘수완지구는 물론 광산구 전체 면적이나 인구 대비 도착안내시스템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추가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수완지구(4.62㎢)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7만8912명으로, 광주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남구 효덕동(4만8572명) 보다도 3만340명이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여대를 설치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광주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 순차적으로 251대를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완지구의 인구 급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버스정류장 이용자 수, 버스 노선 수,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수완지구 내 정류장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수완지구는 근본적으로 기본 인프라인 버스노선 자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완지구 주민들은 부족한 노선과 함께 도착안내시스템 혜택도 못받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최근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수완·효천지구 등 신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을 진행중이다. 노선이 개편되면 수완지구의 버스노선이 크게 늘어나고, 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수완지구 내 도착안내시스템 추가 설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광주-함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5곳에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수완지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수완지구 인구가 많지 않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도착안내시스템 1대당 1200만~13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추가 설치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법시험 4년 유예’ 후폭풍 거세다

로스쿨생들 집단 자퇴·시험 거부 결의

전남대 등 전국 반발 잇따라

교수들은 사시 출제 거부키로

2017년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여명 등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집단 자퇴서를 제출키로 했고,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4일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물러섰다.

6일 전남대 로스쿨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30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함께 학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학교측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 항의 방문(9일),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과 연계한 법무부 항의 방문(10일) 등을 검토하고 있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난 5일 치르기로 했던 ‘형사재판’ 실무 시험을 보이콧한데 이어, 오는 12일로 잡혀있는 ‘검찰실무시험’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3학년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기로 하는 등 남은 수업과 시험을 모두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환주 전남대 로스쿨 원장 등 전국 25개교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긴급 총회를 열고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회원의 퇴진요구 서명이 2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최근 여러 법조 단체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와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단체,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이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여러 법조 단체가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해왔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사시 4년 유예는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 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 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여종업원 뇌사’ 성매수자 리스트에 전남경찰 광역수사대 직원 포함

광역수사대가 돌연 수사 맡아 적절성 논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여수 유흥주점 여성종업원 뇌사 사건’<광주일보 4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동료 여성종업원들이 경찰에 제출한 ‘성매수자 리스트’에 광역수사대 직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역수사대가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단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6일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업주의 폭행 여부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는 광수대 직원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들로 최근 수사전담팀을 다시 꾸렸다. 업주의 폭행 여부는 광수대가, 성매수 남성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성매수자 리스트’에 광수대 직원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수자 리스트에는 지역 경찰과 공무원 등 3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광수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년 전에는 광수대 전남 동부권 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팀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광수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건을 이첩받은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당초 사고를 당한 여성의 가족들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수경찰서 관계자들과 수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전화로 수사 의지를 밝혀왔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말이다.

여성단체는 지난 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수사1계에서 담당 부서를 배당하지만 이런 절차도 생략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우리 직원의 이름이 성매수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라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에서는 배제했고, 여수경찰서의 수사에 대한 말이 많아 사건을 이첩받게 됐다”며 “여성단체 쪽과도 그 직원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여수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강모(여·34)씨가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동료 여성종업원 9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대학 자율에 맡겨라” 촉구

국립대 총장 후보를 선정할 때 직선제(교수 투표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방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국공립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4일 성명서에서 “교수들의 뜻에 반해 기존의 간선제 정책을 두둔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위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문위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자문위는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직선제 폐지를 당연시하며 간선제 강화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총장 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과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할 것”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급차서 응급처치, 치료비 청구 못한다”

광주고법 “이송료에 포함” 판결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했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청구할 수 없다’이다. 법원이 “이송료에 의료장비 사용료와 응급처치비가 모두 포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지역 모 응급환자이송회사 대표이사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8일 회사 특수구급차로 응급환자 B씨를 순천의 한 병원에서 부산 모 병원까지 약 190㎞를 이송했다. 이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해 B씨에게 약 2시간동안 고압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후 회사는 이송 중 응급처치비 명목으로 25만원을 B씨의 가족에게 청구했다.

전남도는 2012년 9월 이 같은 응급치료비 청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로 1개월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2012년 개정 이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응급치료비 청구가 정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에 전남도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송료에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출동비용, 이송 중 사용한 의료장비 사용료와 처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박정욱기자 jwpark@

‘왜 잠깨워’ 떠드는 학생들 흉기 위협 후 계단서 다시 ‘쿨쿨’

쌍나팔

○…술 마시고 잠자던 40대 남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 앞을 지나던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고선 집 계단에서 다시 쿨쿨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덜미.

○…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원룸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지난 4일 밤 10시께 학원을 마치고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A(13)군 등 20여명을 협박한 혐의.

○…김씨는 이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내려가 “누가 시끄럽게 떠드나, 모두 이리 와봐”라고 20m 가량 떨어진 학생들에게 고함을 지른 뒤 원룸 계단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그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의를 준 것이지 협박은 아니었다. 잠결에 별 생각 없이 한 짓으로 흉기를 제대로 들 힘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14349	1	서구 상무대로935번길15, 1동 2층 201호 [쌍촌동,신천파크맨션] 84.99㎡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10705	1	북구 용봉동 10-39 119㎡	대	88,538,600 88,538,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효산로6번길15-6 1층65.88㎡ 2층54.11㎡ 부속건물 광3.0㎡제시외세멘장등14.9㎡	단독주택		
2015타경14417	1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57-3 450㎡	대	101,873,700 101,873,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현황일부도로
		곡성군 곡성읍 읍내27길 9 56.2㎡ 제시외 창고 등 55.9㎡,강나무,화단 등 1식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6409	1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588 575㎡	전	5,750,000 5,7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9606	1	나주시 금천면 오감리 222-3 653㎡	답	917,635,000 917,635,000	일괄매각,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22-21 169㎡[일반상업지역]	대		
		동소 222-30 1106㎡[일반상업지역]	답		
2015타경12107	1	화순군 동면 서성리 198-13 554㎡[현황대지]	임야	110,800,000 110,800,000	
2015타경14530	1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698-2 659㎡	대	11,862,000 11,862,000	매각대상아닌타인건물소재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8818	1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140㎡	대	41,235,920 41,235,9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877-2 82.6㎡ 제시외 창고등 60.88㎡	점포		
2015타경12541	1	화순군 북면 원리 439-1 377㎡[현황니지]	잡종지	24,926,130 24,926,13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창고및축사]제외
		동소 439-8 226㎡[현황건부지]	잡종지		
		동소 439-9 136㎡[현황건부지]	잡종지		
		화순군 북면 백아로 1366 142.45㎡ 52.64㎡[창고] 8.00㎡[화장실] 부속건물 농기계보관소 87.87㎡	근린시설		
[기타]					
2015타경10019	1	북구 원숭동 977-14 1620.5㎡	공장용지	898,922,080 898,922,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33-3 에이동 1층 430.98㎡ 2층441.16㎡ 비동 424.20㎡ 제시외 창고 등 114.2㎡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변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12. 22.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2. 29.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의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됨다. 매수신청의 법률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자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하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불권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앞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제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받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제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하부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기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참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